광주·전남코로나확진 1000명 '눈앞'…거리두기 2단계고비

광주·전남 격리인원 7000명넘어…검사중 1만4000명 9개월간 누적 검사인원 광주 20만 명·전남 10만 명 전남병원·교도소·전남 동부권 추가 감염자 이어져 감염원 깜깜·무증상 '조용한 전파'…4차 감염 사례도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가 주말과 휴일에도 멈춤없이 확산되고 있다. 주말 늦가을비에이어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내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집단 감염의 경우 최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무증상 확진자도 50%를 넘긴 가운데 곳곳에서 n차 감염이 속출하면서 최다 4차 감염까지 발생해 다가오는 11월 넷째주가 2단계 격상 여부의 중대한 고비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누적 확진 1000명 육박···최다 기록 속속 객시

22일 광주시·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초 지역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오전까지 누적 확진자는 광주가 614명, 전남이 353명으로 모두 967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90% 가까이는 지역 내 감염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1일 14명(광주 6, 전남 8) 이후 11일째 두 자릿수 증가다. 지난 18일 엔 35명, 앞서 16일엔 33명이 하룻 사이에 확 진됐다. 광주에서는 68일 만에 두 자릿수 확진 자가 나왔고, 전남 역시 지난 18일 27명으로 일일 최다 확진기록을 갈아치웠다.

주요 감염 유형은 전남대병원 관련이 60명 (타지역 전파 포함)을 넘겨 가장 많고, 광주에서는 상무 유흥주점(룸소주방), 남구 호프집, 교도소, 전남에서는 광양 기업체·쇼핑센터·식당·PC방, 순천 은행·식당·헬스장·병원, 여수산단, 화순 요양보호사 등이다.직군들로도 의사, 간호사, 경찰관,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와학생, 아이돌보미, 우체국 직원, 은행원 등 다양하다.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중인 인원도 광주, 전남 합쳐 70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 접촉이나 방문 등으로 검사중인 인원만도 1만4000명을 넘나들고 있다. 지난 9개월간 누적 검사인원도 광주는 20만 명, 전남은 10만 명을 넘겼다.

현재 추세대로 라면 11월 넷째주에 광주·전 남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 다.

◇가족·지인 타고 '4차 감염'까지

n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전남대 병원 관련 확진자만 60명을 넘긴 가운데 3차 감염, 4차 전파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 전남대병원에 입주한 모 금융기관 직원인 광주 562번은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같은 병원 방사선사인 남편, 초등생자녀, 부친도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남편, 자녀를 통한 추가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친(565번)과 함께 등산을 다녀온 지인이 확진돼 573번으로 분류됐고, 573번과 가족 관계인 580번이 순차적으로 추가확진되면서 4차 감염이 발생했다. 은행 직원인 562번의 감염 경로가 밝혀질 경우 최고 5차 감염인 셈이다.

남구 호프집과 관련해서도 n차 감염된 확진 자의 지인에 이어 지인의 자녀까지 연쇄 감염 되기도 했다

상무 유흥주점, 순천 통근버스, 광양 PC방, 여수산단을 기점으로 한 n차 감염도 확산되거 나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에 취약한 겨울 추위가 예고되고 있다. 밀집·밀폐·밀점한 환경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클럽 등 유흥시설, 주점, 식당, 카페 유흥주점, 노래방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수능이 눈 앞인데" 학생 확진 잇따라 비 산

대입 수능시험을 10여 일 앞두고 광주·전남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에 설치된 재학생들이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 1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학생·교직원 1070여 명이 전수 검사를 받는다.

에서 고3 수험생을 비롯해 초·중·고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잇따르면서 교육 당국 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이달 들어 확인된 것만 고교생 2명, 중학생 1명, 초등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 대부분은 전남대병원, 광주교도소, 남구 호프집 관련 확진자들의 자녀들이다. 남매지간도 있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영암에서 고3 수험생들이 코로나19 최종 양성판정을 받아 병원에 격리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순천에서는 지난 18일 초등생 3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각 학교에서는 적게는 수 백명, 많 게는 1000명 이상의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코 로나19 전수조사를 받았다.

교육청은 수능을 앞두고 고3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거점병원 등지에 확진자 특별고 사실도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은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반드 시 참여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는게 무엇 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감염에 노출되지 않 도록 모임, 취미, 동호회 등 개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교내·외 각종 집합행사도 비대면으 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미희기자

전남대병원 의료진 마스크 안 써 집단감염…'정밀 조사'

"턱스크·코스크한 채 병원 내 이동·환자 진료"

광주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전남대학교 병원에 대해 의료진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22일 "전남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 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우선 CCTV를 통해 의료진 일 부와 환자, 보호자 등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 용하지 않은 채 병원내를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일부 의료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했으며 일명 '코스크· 텍스크' 상태로 환자를 진료 하는 모습도 파 악했다

이같은 모습은 병원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일부 확인 되기도 했다.

병원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마스크를 100%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위험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의 활동공간과 원내에서 일부 실수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방역을 강화하고 교육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를 토대로 병원내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진료 과정에 대해서 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역의 다른 의료기관도 방역 수 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20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600명을 돌파했다. 최근 광주지역 코로나19 감염 경로도.

광주시는 최근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상무룸소주방에 대해 폐쇄조치 했으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선옥기자

인허가 편의 명목 뇌물 챙긴 전직 공무원 실형

뇌물 요구로 과거 집유 "공정성 훼손, 엄벌 필요"

태양광 개발 행위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허위 공문을 작성해 불법 증축 을 묵인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실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허위 공 문서 작성, 뇌물 수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 소된 전직 광주 서구청 간부 공무원 A(60)씨 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추징금 2277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태양광 관련 업체 대 표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2065만 원을 수수한 혐

A씨는 2018년 2월과 9월 업무상 편의를 제

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른 업자들에게 106 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만 원이 넘는 명절 선 물을 받는가 하면, 원룸 불법 증축을 원상 복 구한 것처럼 허위 공문 2장을 작성·행사한 혐 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알선 명목 내지 직무에 관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원상 복구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청렴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알선수재죄의 경우 실제로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동 종 범죄 전력,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 여러 양 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